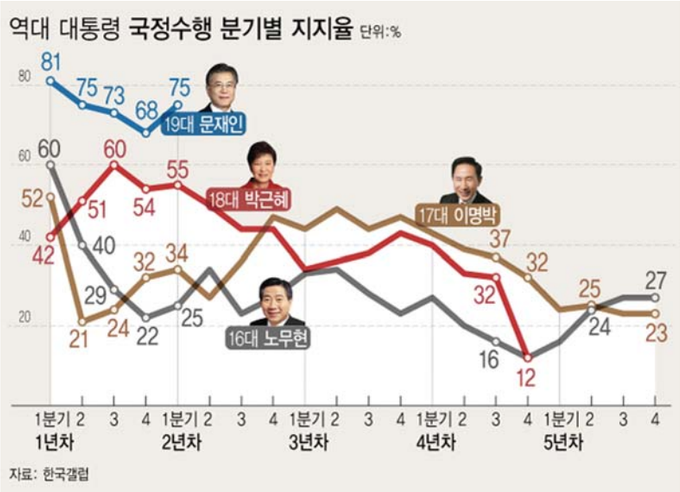
文대통령, 취임 16개월만에 국정 지지율 50% '첫 붕괴'

경제 · 민생 문제 해결 부족…역대 대통령 특정 기점 내림세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 당선 직후 최고치인 81%에서 시작해, 1년4개월만에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 선이 붕괴되며 내림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9월1주차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 부정평가는 42%로 집계됐다. 주요인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공통적으로 임기 초 높은 지지율에서 시작해, 특정 기점을 마지노선으로 내림세가 본격화돼왔다.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0%대 지지율에서 시작해 집권 9개월 만에 29%를 기록했다. 형 노건평 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측근 불법 선거자금 논란, 종부세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집권 15개월 차엔 25%를 찍고 20~30%대 지지율을 맴돌다가 집권 4년 차엔 12%까지 찍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52% 지지율에서 시작,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논란이 거세지면서 집권 6개월만에 무려 21%로 폭락했다. 이후에 4대강 사업 추진이 발표되고, 용산 참사 등으로 20~30% 지지율을 보이다가 집권 15개월 차엔 34%를 기록했다. 다만 UAE원전 수주에 성공하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 도발이 있던 집권 2~3년 차엔 40%대 지지율을 회복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42%라는 저조한 지지율로 출발했다. 그러나 외교활동에 성과를 내며 집권 9개월 만에 60%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보였다. 이후 50~60%대를 반복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집권 18개월 차, 50% 지지율을 찍은 후 하락 곡선을 그렸다. 임기 마지막인 4년차에는 12%까지 내려 앉았다.

이와 비교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권 최고치인 81% 지지율에서 시작해, 집권 14개월까지 70%대 안팎의 지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경제·민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던 지난 7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월별 지지율에 따르면 지난 7,8월 국정 지지율은 각각 67%·58%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 9월 1주차 지지율이 40%대에서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본격 하향세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달 평양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등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에 나름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75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이 응답, 1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이낙연 총리 "옛 전남도청 복원 속도감 있게 추진"

"5월 광주에 진 빚 갚을 것…복원협의회 책임 · 권한 필요 공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월어머니와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촉구 농성장에서 오월 어머니들을 만나 "5월 광주에 항상 빚을 지고 살았다. 이참에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 빨리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옛 도청 문제를 빚으로 여기고 있다"며 "복원 밑그림과 방향이 제시된 만큼, 광주시와 한 마음으로 옛 도청 복원 작업에 주력하겠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 실천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도청 복원협의회에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원)추진 체계를 갖춰야 하는 데 공감한다. 원하는대로 의견을 주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것이다. 예산 증액과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단체 등의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점거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균형있게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고 전했다.

'출범을 앞둔 5·18 진상조사위회를 이끌 위원 9명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률상 각 정당이 추천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못할 것이다. 법 취지에 충실한 인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8일 광주 동구 옛 도청 농성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월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해찬, 요직에 측근 배치… '기대와 우려 공존'

"안정적 당운영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집값 안정과 지방분권 등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고위 당정협의가 정례화되는 등 당정관계도 앞선 지도부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노·친문 좌장으로 불리는 이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후년 총선에서 재집권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는 지지층의 기대가 9일 현재까지는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이 대표 취임 이후 전임 지도부와 달리 현안에 대한 의제 선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했다.

단 또다른 과제로 꼽혔던 당내 계파 통합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그룹의 분화가 노출되면서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별다른 잡음은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경선 기간 '원팀'과 '탕평인사'를 약속했고 경쟁자였던 김진표,송영길 의원을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진표 의원을 공개 지지했던 '친문주류' 전해철 의원과도 면담하는 등 포용에 나섰다.

하지만 주요 요직에는 측근 그룹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 살림과 내년 총선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선임된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12년 이 대표가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에도 사무총장을 맡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당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대표비서실장에 임명된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07년 이해찬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을 지원한 바 있다. 제3사무부총장에 선임된 김현 전 의원도 당시 캠프 공보실장으로 활동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꼽히는 홍미영 전 의원도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호중-김태년 의원은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이다.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경선 초기부터 예상됐던 수준의 인사"라고 평했다.

또다른 의원은 "이 대표의 등판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대표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측근 그룹의 전횡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당 운영과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 그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내 안정 또는 분쟁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이재오 "MB, 盧죽음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있어"

친이계 좌장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7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상임고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에게 쓴 탄원서에는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서 있고, 법정에 세워져 있다"며 "그것 이외 어떤 해석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매주 화요일 재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청하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설명도 빠짐없이 들었다"며 "죄가 되느냐의 여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적어도 그들이 제출한 정황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세상은 그 분이 재임 중이 아닌 10년도 훨씬 지난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의 일이자 알지도 못하는 아랫사람들의 일로 감옥에 갇혀 병든 몸을 지탱하며 죽을힘을 다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